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야 하는가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야 하는가

루리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할지는 형평성, 시장 충격, 징수 인프라라는 세 축에서 따져야 하며, 유예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할지는 형평성, 시장 충격, 징수 인프라라는 세 축에서 따져야 하며, 유예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한 논설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다. 국회 논의 중인 사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 주장

가상자산 과세를 한 차례 더 미루자는 요구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유예의 이유가 "준비 부족"이라면 준비의 기준과 기한을 먼저 못 박아야 한다. 기한 없는 유예는 과세 공백을 고착시키고, 반대로 준비가 덜 된 상태의 시행은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준다. 필요한 것은 유예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무엇이 갖춰지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표다.

2. 근거

2-1. 현행 법령의 내용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고,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이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세율은 20%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한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cntntslid=23893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238935>)). 이미 한 번 미뤄진 제도이므로 "또 미룬다"는 말은 곧 두 번째 유예를 뜻한다.

2-2. 형평성

과세 찬성 쪽의 핵심 논거는 다른 투자 소득과의 형평이다.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는데 가상자산만 비과세 상태로 두면 같은 소득에 다른 세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반대 쪽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손실 처리 방식(이월공제 등)이 같은지에 따라 형평이 달라진다고 본다. 이 글이 확인한 국세청 안내문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비교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2-3. 시장과 투자자

유예 찬성 쪽은 과세 전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제도(거래소 신고 체계, 사업자 규율 등)가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세가 시작되면 거래 기록 관리 부담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는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간 이동 기록은 국내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모두 파악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연간 거래집계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2&cntntslid=238937>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2&cntntslid=238937>)). 이 제출 체계가 국내 사업자 중심이라는 점이 해외 이동 거래의 사각지대 논란의 배경이다.

2-4. 해외 사례

국제적으로는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각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흐름이 진행 중이다. OECD 글로벌포럼 발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합류하면서 77개 관할권이 2027년, 2028년 또는 2029년까지 이행을 약속한 상태다 (<https://www.oecd.org/en/networks/global-forum-tax-transparency/news-events/2026/argentina-commits-to-start-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crypto-asset-transactions-by-2029.html> (<https://www.oecd.org/en/networks/global-forum-tax-transparency/news-events/2026/argentina-commits-to-start-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crypto-asset-transactions-by-2029.html>)). 한국이 어느 해에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각국의 개별 과세 방식(세율·공제)이 어떠한지는 이 글에서 비교 수치로 단정하지 않으며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정보 교환 체계가 가동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분의 파악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3. 반론과 재반박

반론 1. 준비가 안 됐으니 미뤄야 한다. 취득가액 산정, 시가 기준, 해외 거래 파악 같은 쟁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다.

재반박. 하위 법령과 안내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 부분을 서둘러 확정하라는 근거는 되어도, 제도 전체를 늦추라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시행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유예된 기간 동안 무엇이 정비되었는지 공식 점검이 먼저다.

반론 2. 과세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한다. 과세가 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재반박.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과세 시행이 거래 규모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가 필요하나, 이 글은 그런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없는 예측으로 제도를 판단할 수는 없고, 해외 이탈은 정보 교환 체계가 확대될수록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론 3. 과세 폐지·장기 유예가 낫다. 국회에는 시행일을 늦추거나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재반박. 폐지는 형평성 논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반대로 과세 강행론도 "시행만 하면 해결된다"는 낙관에 기대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제도의 완성도로 판단할 일이다.

4 4. 결론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의 입장은 이렇다. 첫째, 유예를 하더라도 기한과 조건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시행을 하더라도 취득가액 산정과 시가 기준 같은 하위 규정을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해야 한다. 셋째, 형평성과 시장 충격이라는 두 논거 모두 현재 공개된 공식 통계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수치를 투명하게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행이든 유예든 결정의 근거가 공개될 때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다.

5 5.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23893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238935>)
-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2&cntntslId=238937>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2&cntntslId=238937>)

- OECD 글로벌포럼, CARF 이행 약속 관할권 발표:
<https://www.oecd.org/en/networks/global-forum-tax-transparency/news-events/2026/argentina-commits-to-start-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crypto-asset-transactions-by-2029.html> (<https://www.oecd.org/en/networks/global-forum-tax-transparency/news-events/2026/argentina-commits-to-start-automatic-exchange-of-information-on-crypto-asset-transactions-by-2029.html>)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개정안 처리 여부 확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6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